

#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어디로 가고있나?



이 성 모 농민신문사 농정부 차장

최근에 와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대한 로비활동이 정부, 국회를 비롯하여 농업생산자단체·농민단체 및 농민대표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로비활동은 지난 7월 2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그룹「드쥬」의장의 합의 초안이 밝혀지면서 본격화되었는데 뒤늦게나마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

다지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왜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으며 우리나라 농업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 왜 시작됐나?

우루과이라운드는 자유무역을 그 기본정신으로 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가 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출범한 여덟번째 다자간(多者間)

무역협상으로서 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다 텔 에스테」 각료 선언에 따라 개시된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GATT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1947년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며 탄생했으며, 64~67년 케네디라운드(주의제: 관세율인하), 73~79년 동경라운드(주의제: 비관세장벽완화) 등 제6차·제7차 다자간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보조금전쟁」 탈출방안 모색

그러나 GATT는 이제까지 농산물에 관해서만은 농산물의 특성과 각국농업의 특수성을 인정, 자유무역주의 원칙에서 예외로 취급해왔다.

그 결과 70년대 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부족했던 식량이 각국의 농업보호정책에 힘입어 80년대 들어와서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곡물의 재고누증이 심화되기에 이르렀고 이는 곧 농산물 무역분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

다.

특히 미국과 EC는 농산물의 생산과잉으로 재고가 누적되자 이를 해소하기위해 서로 막대한 수출보조금과 국내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한 국내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조금전쟁」을 벌여왔으며 그 결과 양쪽 모두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EC는 이같은 재정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선진수출국의 수출보조금을 삭감하고 또 수입국에는 생산보조금의 감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시작에 동의하게 됐다.

물론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산물협상만을 의제로 삼고 있지는 않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체제는 무역협상위원회(TNC) 안에 상품협상그룹(GNG)과 서비스협상그룹(GNC)로 나뉘어 있으며, 상품협상그룹은 관세·비관세·지적소유권·농산물등 14개 의제(議題)로 다시 나뉘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협상은 GNG의 14개 의제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산물협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게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 협상이 원만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농산물협상에 성과가 없다면 우루과이라운드 자체가 실패라고 말할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어떻게 진행돼 왔나?

그러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86년 9월 출범이후 지난 7월 드류의장 협상초안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를 살펴보자.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예비협상단계라 할 수 있는 제1단계(86. 9~89. 4)와 구체화단계라 할 수 있는 제2단계(89. 4~90. 7)로 나뉘 살펴볼 수 있다.

제1단계인 예비협상단계로는 지난 87년 2월부터 88년 11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농산물 그룹회의가 있었으며 여기서 주로 논의된 것은 세계농산물의 무역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국내생산보조·수출보조를 철폐 내지 감축해야 하며 모든 농산물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국은 이같은 기본원칙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88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중간평가 각료회의는 농산물협상 장기 목표설정에서 있어 보조금의 완전철폐를 주장하는 미국과 보조금의 점진적 감축을 주장하는 EC와의 대립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 중간평가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아무런 진전없이 끝났다.

그러나 89년 4월 미국과 EC 양측은 『상당한 수준의 누진적 감축』에 합의함으로써 비로소 진전을 보기 시작하게 된다.

여기까지를 제1단계라 한다면 그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드류」 합의초안이 나오게 된때까지를 편의상 제2단계라 할 수 있다.

## 4가지 의제...협상 난항거들

이 제2단계에서는 89년 4월 미국과 EC의 합의를 바탕으로 협상내용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즉 89년 5월부터 12월까지

협상목적의 달성을 위한 각국의 제안이 제출되고, 이듬해인 금년 2월에는 농산물협상 의제를 ▲ 국내보조 ▲ 국경조치 ▲ 수출보조 ▲ 동식물검역규제등 4가지로 한다는 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상의 4가지 의제를 둘러싸고 미국·EC·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난항을 겪게 됐다.

그러자 「드쥬」의장은 이러한 난항을 타개하기 위해 비공식회의 위주의 협상을 진행시킴으로써 지난 6월 27일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위협적인 「드쥬」합의 초안이라는 것을 내놓게 됐다.

그리고 이 「드쥬」합의초안은 7월 11~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3차협상에서 미국과 함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EC가 농산물수출보조금의 급속한 감축등에 이의를 제기해 일단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드쥬」합의초안은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결국은 드쥬의장의 이 초안을 토대로

EC의 입장을 다소 보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하겠다.

## 각국의 기본입장은?

여기서 「드쥬」합의초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기본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가장 강경하게 주장하는 미국·케언즈(Cairns)그룹, 농산물의 교역 자유화라는 기본입장에는 미국 등과 이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이행방법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는 EC, 식량안보등 비교역적기능(NTC)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스위스·북구3국, 그리고 교역자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의 보상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 등이다.

미국과 함께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는 케언즈

그룹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말레이시아·우루과이·브라질·칠레·콜롬비아·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헝가리 등 13개국이 회원국으로 돼있다.

### 농산물교역 완전자유화 목표

이들 미국과 케언즈그룹의 입장은 농산물교역의 완전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입이 개방된 품목은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수입규제품목은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을 모두 관세로 흡수하되 10년간의 유예기간중 일정수준으로 관세를 낮춰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2중가격제·생산 및 출하장려금·생산조정·결손보전·저리의 영농자금등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각종 보조금 역시 10년간의 유예기간중 일정수준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이와 함께 수출보조금은 이보다 빠른 5년간의 유예기간안에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농산물수입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식량등에 대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를 풀고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관세로 흡수하는데 있어 다른 농산물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국내소비량의 일정수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관세 역시 10년간 점진적으로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수출보조금 급속감축에 반대

이에 대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중 하나인 EC는 농산물의 교역자유화라는 기본입장에는 미국등과 이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이행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농산물 수출보조금에 있어서 이를 국내보조금등 다른 농업보호정책 보다 빠른 속도로 감축하자는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수입자유화품목에 대한 관세동결과 수입규제품목에 대한 관세화 과정에서도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EC의 농업정책중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공동농업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은 급속히 감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EC는 이제까지 수입농산물에 있어 수입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액을 가변과정금으로 징수하여 이를 수출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국내농업기반 유지에 안간힘

미국과 케언즈그룹, 그리고 EC 각국이 식량수출국으로서 협상태이블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과 맞서 각종 농업정책을 가능한한 최대한 인정받으려는 협상그룹이 농산물수입국들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스위스·오스트리아·북구3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이 속하고 있다.

이들 농산물수입국들은 기본적으로 국내농업기반 유지를 위해 비관세장벽과 국내보조금지

급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쌀·낙농제품등 기초식량등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을 인정, 예외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국내보조금 감축등에 대한 유예기간의 최대한 확보와 주요관심품목의 비교역적 기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별우대·보상확대 요구

마지막으로 농산물수입국 가운데는 이집트·자메이카·페루 등 개발도상국들이 있는데 이들은 충분한 유예기간과 정책선택의 탄력성 부여등 특별우대조치를 강조하는 한편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원조·차관공여등 선진국측의 보상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크게 나뉘 4개그룹의 상반된 기본입장으로 인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86년 9월 시작된 이래 90년 7월 「드쥬」 합의초안이 나올 때까지 4년 가까이 끌어왔던 것이다.

## 「드쥬」합의 초안이란?

이 합의초안을 도출해낸 「드쥬」는 네덜란드 사람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15개 협상 그룹중 (GNS포함) 농산물협상그룹의 의장을 맡아오고 있다.

그리고 「드쥬」는 협상종료시한(90년 12월 31일)이 불과 6개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협상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각국의 입장을 취합해 앞으로 협상을 이런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의장직권으로 내놓은 안(案)이 바로 「드쥬」합의 초안이다.

### 규제철폐·보조금감축등이 골자

「드쥬」의장의 합의초안은 ▲ 농산물의 관세인하 및 각종 수입규제조치(비관세장벽)의 철폐 ▲ 국내농업보호를 위한 보조금의 감축 ▲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급속한 감축 ▲ 수입농산물의 검역 및 위생규제의 국제기준적용 ▲ 개발도상국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조치 인정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의 관세인하 및 각종

수입규제조치의 철폐는 각국이 이미 수입을 자유화한 농산물의 관세를 현행 수준에서 더이상 올리지않을 것을 GATT에 약속하고,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도 모두 자유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입제한 품목을 개방할 때 초기에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고율(高率)의 관세를 부과토록 하되 앞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일정기간안에 이를 상당수준까지 감축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합의초안은 국내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감축기준연도를 88년으로 하고 시장가격지지정책, 생산농민에 대한 직접보조금, 농자재및 유통비용지원, 저리의 금융지원등 주요농업지원책을 감축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농업 및 농촌사회 전반에 이익을 주는 정책(연구·조사·훈련사업·농산물검사·병해충방제등), 순수재해구호 및 작물보험, 영세농구호사업, 식량안보 목적을 위한 공공채고등을 허용대상으로 삼되, 이것조차도 ▲ 정부재정에 의한 지원일것 ▲ 생

산과 연계되지 않을 것 ▲ 가격 지원효과가 없을 것 등의 전제 조건을 붙여두고 있다.

다음으로 합의초안은 수출보조금에 있어 최근 3년간의 평균 지원규모를 기준으로 국내보조금 감축보다 빠른 속도로 줄여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검역 및 위생규제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각국이 수입제한을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검역이나 위생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상 개략적으로 살펴본 「드류」합의초안이 올 연말 별다른 수정없이 타결안으로 채택된다면 (사실상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 생산기반에 심각한 타격우려

우선 대부분의 국내농업지원정책이 감축대상으로 됨으로써 쌀·보리의 2중가격제, 양념류 등의 가격안정대 및 수매비축제, 장단기 저리 영농자금의 지원등

이 어렵게 된다.

그리고 착수단계에 있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도 영향을 미쳐 차액보상·생산조정 보상 등 수입자유화 보완대책과 농업구조개선대책도 이를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뿐만아니라 현재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농산물(406개품목)의 자유화가 불가피하고 관세도 감축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생산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쌀등 수입이 거의 없는 품목도 일정량의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90년 4월 제정)에 지급근거를 마련한 수출유망품목의 보조금 지원도 어렵게 된다.

### 앞으로의 협상전망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앞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있으나 올 12월 3~7일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정치적 절충을 통한 타결이 예상되고 있다.

협상은 이미 막바지를 향해





줄달음처 10월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Country List와 Offer List를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합의점을 도출하기위한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기본 입장으로 취하고 있는 농산물의 비교역적 기능(NTC)이 어느정도 반영될 것인가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다. 또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이 얼마간 주어질지도 미지수로 돼 있다.

#### 협상결과...대비책 마련도 시급

그동안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에 있던 일본과 스위스 및 북부 유럽등도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완전한 공동

보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식량안보를 강조하던 일본은 다른 농산물은 물론 쌀에 있어서도 상당수준 양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협상에서 농산물수입국의 입장은 크게 악화돼 NTC자체의 반영여부가 우려된다고 할 수 있겠다.

협상이 전개되고 있는 현지에서 로비활동을 벌이고 온 관계자들은 공업국이면서 농업부문에서 후진국인 국가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뿐이었다면서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아무튼 현재의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남은 기간동안 보다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바빠 서둘러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의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